

# EU Brief

| 월간 EU 동향 |

- EU 출구전략의 중요성과 정책적 과제  
The importance of articulating exit strategies and future policy challenges for the EU
- 한-EU 기본협력협정 개정과 한-EU 관계  
The revision of the "Korea-EU Framework Agreement for Trade and Cooperation" expected to strengthen relationship
- 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의 보호주의 조치들을 경계  
Nations use protectionist measures to boost domestic economies
- EU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산업계의 시각  
Industrial sector's view on EU's Climate Change Policies
- 리스본조약의 특징과 시사점  
The Lisbon Treaty: What it contains and what's next?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http://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EU Economy

EU 출구전략의 중요성과 정책적 과제	002
The importance of articulating exit strategies and future policy challenges for the EU	



EU Politics

한-EU 기본협력협정 개정과 한-EU 관계	006
The revision of the "Korea-EU Framework Agreement for Trade and Cooperation" expected to strengthen relationship	



Trade Issues

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의 보호주의 조치들을 경계	010
Nations use protectionist measures to boost domestic economies	



Industry Trends

EU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산업계의 시각	013
Industrial sector's view on EU's Climate Change Policies	



EU Law

리스본조약의 특징과 시사점	015
The Lisbon Treaty: What it contains and what's next?	



Social Issues

유럽인의 식습관: You are what you eat!	018
The eating habit of Europeans	



Report Review

EU 출구전략을 수립할 시점	021
EU countries face challenges in adopting exit strategies	



EU Centre news

연세-SERI EU센터 이사회 개최	023
Yonsei-SERI EU Centre bi-annual meeting	
연세대학교 EU Week 개최	024
EU week at Yonsei University	



# EU 출구전략의 중요성과 정책적 과제

## The importance of articulating exit strategies and future policy challenges for the EU

As we are seeing some signs of green shoots of recovery, there has been a heated debate over the timing of adopting appropriate exit strategies. Exit strategies involve withdrawing the fiscal and financial support which were implemented during the economic crisis. Economic stimulus packages led to an explosion of fiscal deficits and hence a fiscal contraction is required in order to balance the budget. On the other hand, the levels of liquidity, which also expanded during the crisis, need to come under control in order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experiencing a more-than-expected rate of inflation. The goal of exit strategies is to minimise the magnitude of emergency measures' negative side effects. There is, however, a risk of a double-dip recession if countries implement exit strategies too soon.

###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확산

세계경제의 위기탈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출구전략(Exit Strategy)에 대한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출구전략의 대상은 위기극복을 위해 취한 정책 분야에 따라 크게 재정과 금융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은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늘어난 재정적자를 줄여나가는 '재정건전화 작업'을 말한다. 그리고 금융부문의 출구전략은 위기탈출을 위한 비상조치로 인해 지나치게 늘어난 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흡수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 ★ 출구전략의 대상 및 주요 내용

대상	주요 내용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조치의 해제, 세출 삭감, 세율 인상, 추가세원 확보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축소</li> <li>- 지속가능한 재정건전화 목표</li> </ul>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국채 매입, CP 매입 등 비전통적인 금융정책으로 불리는 양적완화 정책을 해제</li> <li>- 사실상의 제로금리 상태의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조치</li> <li>- 시중에 풀린 과잉유동성 흡수가 목표</li> </ul>

자료: 구본관 외 (n. d.),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출구전략 행방과 시사점" (미발표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출구전략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취해진 비상조치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재정을

동원한 경기부양책이나 제로금리 및 양적완화 정책은 위기탈출을 위해 동원한 비상조치로 일종의 극약 처방이다. 그런 만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재정지출 확대는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져 국가 부도 리스크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민간소비 지출을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제로금리 및 양적완화 정책은 유동성 과잉을 불러와 물가를 상승시키거나 버블을 형성하면서 자금흐름을 왜곡할 수 있다.

한편, 경기가 본격적으로 상승궤도에 진입하기 전에 서둘러 출구전략을 추진할 경우 상승세에 있던 경기가 재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기선택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1937년 미국 루스벨트 정부의 긴축 정책, 1997년 4월 일본의 소비세 인상, 2000년 8월 일본의 제로금리 해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므로 경기 회복세 지속에 있어 출구전략의 시기 선정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하자 EU는 2009년부터 2,0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집행하기 시작하는 등 비상조치들을 시행하였다. 비록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경기부양책 규모는 작았지만 친환경제품 개발 및 확산 촉진, 중소기업 금융지원, 인프라 현대화 등 파급효과가 큰 부문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조기에 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금

융부문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조치와 유동성 공급 정책을 먼저 실시했다. 기준금리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2%에서 0.25%로 인하한 반면, 유로 지역은 4.25%에서 1%로, 영국은 5%에서 0.5%로 큰 폭의 인하를 단행했다. 또한 장기시장 조작, 공개시장 조작의 적격 담보대상 범위 확대 등 유동성 공급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 ★ EU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규모

	경기부양책 규모	GDP 대비 경기부양책	기간
영국	200억(파운드)	1.4%	2009~2010년
프랑스	260억	1.3%	2009~2010년
독일	730억	2.9%	2009~2010년
이탈리아	800억	5.2%	2009~2013년
스페인	110억	1.1%	2009~2010년

자료: 구본관 외 (n. d.),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출구전략 행방과 시사점" (미발표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최근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 EU와 유로 지역의 2/4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0.3%와 -0.2%로 1/4분기의 -2.4%와 -2.5%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독일, 프랑스 등 유로 지역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기인한다.<sup>1</sup> 실제로 독일은 신차구입보조금 제도의 시행으로 7개월간 200만 대의 자동차가 새로 판매되기도 했다. 산업생산, 구매관리지수(PMI), 경기신뢰지수 등 실물경기 지표들은 회복세를 지속했다. 8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9% 증가하는 등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구매관리지수(PMI)는 3개월 연속 경기확장국면인 50을 상회하였으며<sup>2</sup>, 경기신뢰지수도 7개월 연속 상승세<sup>3</sup>를 보였다. 이와 같은 실물경기 회복세를 반영하여 유로 지역의 3/4분기 경제성장률이

플러스(0.1%)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ECB는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켜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재정부문에서는 부작용이 우려

금융위기로 인한 비상조치들로 인해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서는 했으나, 재정적자 확대, 공공부채 급증 등 부작용은 오히려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형국이다. 2009~2010년간 공공부채와 재정적자 규모는 기존 EU의 보수적인 거시경제 기조<sup>4</sup>를 크게 넘어설 전망이다. 공공부채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엄격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 대한 구제금융 투입은 공공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구제금융에 투입된 금액은 총 3조 7,770억 유로이다. 그 결과 2010년 EU의 GDP 대비 공공부채는 79.4%, 재정적자는 7.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EU의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실업급여, 연금 등 사회보장 축소로 이어진다면 민간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위험성도 있다. EU의 실업급여 소득 대체율은 80~90%에 이르는 등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기 때문에 재정적자 확대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sup>5</sup> 또한 국채발행 급증으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이나 재정적자 확대로 인한 국가신용등급 하락 또한 경기회복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유럽은행의 부실자산 증가로 인해 자본확충 등 구제금융 투입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반면, 금융부문의 부작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비상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이

<sup>2</sup> 구매관리지수(PMI): 50.4(8월)→51.1(9월)→53.0(10월)

<sup>3</sup> 경기신뢰지수: 67.3(4월)→86.2(10월)

<sup>4</sup>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 재정적자 수준은 GDP 대비 3% 이내, 공공부채는 GDP 대비 60% 이내로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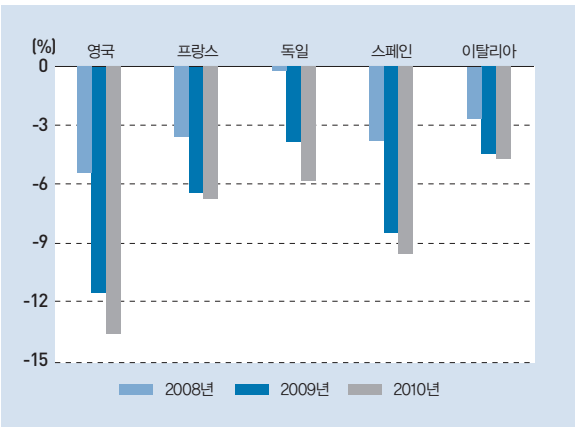
<sup>5</sup> 최근 EU의 실업률은 9.2%(9월)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0.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up>1</sup> 하지만 스페인, 아일랜드 등은 기존의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 EU 주요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변화 추이



자료: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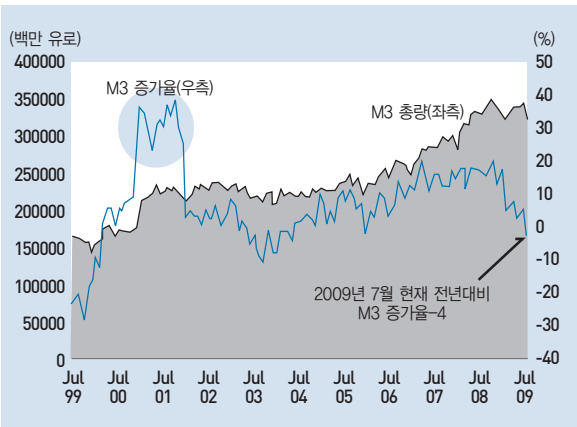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대출이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통화량(M3) 공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다. 유로 지역 총통화량 증가율은 2008년을 기점으로 지속적 감소 추세<sup>6</sup>를 보이기도 했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속적인 하락세<sup>7</sup>를 보이고 있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현재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이 먼저 시행될 전망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EU의 금융과 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은 각각 상이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부문에서는 유동성 공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출구전략이 당장 시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유동성 과잉 공급 문제가 단기간 내에 발생한다고 가정해도 환매조건부계약과 외화유동성 공급부문 등은 시장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결국 금융부문에서는 ECB를 중심으로 빅뱅식이 아닌 단계적 수순을 밟는 출구전략이 시행

<sup>6</sup>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M3 증가율이 4% 이하로 지속적 감소 추세  
<sup>7</sup> 9월 소비자물가가 -0.3%로 재차 하락하며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가중

★ 유로 지역 M3 증가율 추이



자료: ECB Statistics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출구전략이 시작되어도 중앙은행이 당장 금리인상을 실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각종 유동성 공급정책부터 점차적으로 철수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단계는 국채매입의 종료, 그 다음은 모기지 관련 증권과 각종 위험증권 매입의 중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유로 지역의 경기 및 은행시장 회복이 지연될 경우 ECB의 양적완화 규모는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부문에서는 확장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 쪽으로는 당장 출구전략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직면해 있다.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ser)<sup>8</sup>로 인한 세수감소는 재정을 더욱 압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각 회원국들은 경기부양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2010년부터 본격적인 세수 확대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독일은 2016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0.35% 이내로 제한하고 2020년 이후에는 균형을 목표로 하는 재정건전화 법안을 승인했다.<sup>9</sup> 영국은 2010년 이후 매년 재정수지를 GDP 대비 0.5%p 이

<sup>8</sup> 경기침체 시 개인과 법인의 세금 납부액이 줄어들고 실업급여 수령액이 증가하여 자동안정화 기능이 작동

★ EU 주요국의 세수확대 조치

국가	방안	상세내용
영국	증세	고소득자의 소득세율 현행 40%→50%(당초 45%로 인상 계획하였으나 50%로 상향 조정), 주류세 및 담배(각각 2%) 인상, 유류세(리터당 2%) 인상, 조세 도피처였던 영국령 케이만 제도에서의 세금 부과를 추진
	지출억제	공공지출증가율 억제 (2011년부터 현행 1.2%→0.7% 성장으로 축소)
	채권 발행	향후 총 2200억 파운드 규모의 채권 발행
프랑스	지출 억제	의료복지 삭감 (1일당 입원비용 16유로→20유로 및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의약품 리베이트 35%→15%)
	소득세 증세	소득세 최고 세율 45%→47.5%,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하한선 기준 50만 유로, 미혼 25만 유로→각각 25만 유로, 12.5만 유로 추진
독일	채권발행	당초 60억 유로 규모의 발행을 계획했으나 41억 유로 규모의 판매에 그침, 48.5억 유로 규모의 채권 발행
	공기업 민영화 및 VAT 증세 예상	현재 메르켈 총리는 VAT 증세에 반대하고 있으나, 로이터의 전망에 따르면 선거 후 증세가 가능하고 국영철도회사의 민영화를 통한 재정 확충 예상
	실업 보험 지출 억제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부담하는 실업 보험 비용 2.8%→3.0%
	채권발행	33.5억 유로의 채권 발행
이탈리아	채권발행	70억 유로 규모의 채권 발행
스페인	증세	6월 유류(리터당 2.9 유로센트 증세), 담배류(1갑당 0.04 유로 증세)에 대한 세금 인상 실시 또한 VAT나 소득세 증세 가능성 존재, 현행 18%인 양도소득세의 상향 조정
	지출 억제	1인당 400유로에 달하는 소득세 감면 계획 취소 예정

자료: 각종 관련 발표 자료를 필자가 정리

상 개선시킬 계획이다. 또한 프랑스는 독일이나 영국에 비해 출구전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지출 통제 강화를 통해 재정건전성 회복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sup>9</sup> 최근 독일의 보수연정은 예산을 깨고 240억 유로 규모의 감세안 계획을 발표했다(2009년 11월). 하지만 이와 같은 감세 계획은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한 국제기구, EU 회원국들, 심지어 독일의 쾰러 대통령, 독일산업연맹(BDI), 지방주까지도 반대하고 있어 합의안이 그대로 실행될지 더 지켜봐야 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제적 상황이 상이하여 회원국 간 조정과

##### 적시 이행이 중요

결론적으로 EU가 당장 적극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경기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의 자발적인 수요 및 투자 회복이라기보다 재정정책 효과에 의한 성장이라는 점에서 성장 동력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설비투자 및 신규고용 저조로 소비심리 회복도 확신할 수 없다. 금융시스템도 안정을 찾아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신용경색 상태가 해결된 상태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경기회복으로 주식 및 회사채 발행은 늘어나고 있으나, 상업은행의 대출은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부실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추후에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를 보인다면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회복되는 회원국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 간의 차이로 인한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프랑스 등은 2009년 2/4분기부터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가시화됨으로써 빠른 회복세를 견인했다. 이에 반해 스페인, 아일랜드 등에서는 주택가격 하락과 건설경기 침체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민간부채 수준도 높고 은행의 대출/예금 비율도 높아 신용경색 문제도 여전하다. 그런 측면에서 ECB를 중심으로 단계적 수순을 밟는 금융부문과 달리 재정부문에서는 회원국 간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 뿐만 아니라 재정부문이 정치적으로도 민감하다는 점에서 선거를 앞둔 회원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 간에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출구전략을 둘러싼 회원국 간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EU 경제의 회복은 더욱 지연될 수도 있다. 리스본 체제가 출범한다면 회원국 간 상이한 환경과 출구전략에 따른 입장 차이를 어떻게 관리해나갈까 얼마만큼의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2010년 EU 경제의 향방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 한-EU 기본협력협정 개정과 한-EU 관계

## The revision of the “Korea-EU Framework Agreement for Trade and Cooperation” expected to strengthen relationship

The revised version of the Framework was signed between Korea and the EU on the 14<sup>th</sup> of October. The amended Agreement strengthens the institutional and legal foundation for both sides, which is crucial in progressing their partnership on the international stage. This Framework will also strengthen their bilateral cooperation in non-economic and non-trade areas and it is expected to act as the foundation, along with the Korea-EU FTA, for improving their strategic partnership.

2009년 10월 14일 런던에서 한국(김은중 외무부 유럽 국장)과 EU(Alan Seatter EU 집행위원회 대외관계총국 북미·동아시아 국장)는 한-EU 기본협력협정 개정안에 가서명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과 EU가 세계무대에서 협력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적, 법률적 기반을 강화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한국과 EU의 양자관계를 되돌아보면, 1963년 7월 한국과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가 수교를 맺었고, 1969년 한국은 EC(European Communities)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였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 양자관계는 주로 경제·통상 분야의 발전에 치중되어 왔다. 이는 냉전시대에 한국과 EU 모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공동보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이후 1989년 냉전 종식으로 국제정치 질서가 다변화되고,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에 따른 EU 출범 이후, EU가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을 갖추게 됨에 따라 한국과 EU는 정치,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필요성과 여건이 조성되었다.

때맞추어 EU는 세계질서에서 확대되고 있는 EU의 위상에 걸맞게,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기를 희망하였다. 그 첫 단계로 1994년 EU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 보고서 <아시아 관련 신전략 (Toward a New Strategy for

Asia)>에서 아시아 국가와 EU의 일반적인 관계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이 보고서에서는 아시아가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룩한 경제발전을 인정하였고, 아시아에서 EU의 입지를 공고히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아시아 대륙에서 EU의 입지 강화에 관련된 근본 목표가 설정되었다. 그 근본 목표는 경제, 정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아시아의 정치적 안정에 기여, 양자관계의 강화, 아시아에서 EU의 지위 개선, 지역협력 증진, 국제질서에서 아시아의 역할 증대 유도, 아시아 경제가 시장경제 질서에서 통합되는 데 기여,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에서 EU 차원에서 조율된 접근방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이다.

아시아 국가와의 정치, 경제 관계 확대라는 맥락에서 EU는 한국과의 양자관계 발전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한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한국과의 관

〈Toward a New Strategy for Asia(1994년)〉의 주요 내용	
• 유럽-아시아 간 양자관계의 강화	
• 아시아에 있어서 EU의 위상 강화	
•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협력 지원	
• 다자협력에 있어서 아시아의 역할 증대 지원	
• 시장개방과 비차별적 무역질서	
•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지원	
• 개발도상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감소에 기여	
•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에서 EU 국가 간 조율 강화	

계가 점차 중요해지게 된 것이 큰 요인이었다. 일례로 한국의 EU 수출은 1988년 88억 달러에서 1996년 141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 ★ 한국의 주 교역상대국 (2008년)

순위	교역상대국	교역액(백만 유로)	%
1	전 세계	560,103.7	100.0
2	중국	129,025.1	23.0
3	EU27	64,097.1	11.4
4	일본	62,671.3	11.2
5	미국	56,827.7	10.1
6	사우디아라비아	21,217.2	3.8

자료: Eurostat

### ★ EU의 주 교역상대국 (2008년)

순위	교역상대국	교역액(백만 유로)	%
1	전 세계	2,861,807.6	100.0
2	미국	435,995.5	15.2
3	중국	326,325.0	11.4
4	러시아	278,770.2	9.7
5	스위스	177,848.3	6.2
6	노르웨이	135,736.0	4.7
7	일본	117,342.0	4.1
8	터키	100,147.5	3.5
9	한국	65,063.6	2.3

자료: Eurostat

1994년 EU 집행위원회가 보고서 <아시아 관련 신전략>을 출간하기 이전인 1993년에 이미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무역담당 집행위원인 레온 브리튼(Leon Brittan)은 한국과 양자 무역 및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EU에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5년 EU는 한국과 무역 및 협력을 위한 기본협력협정(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EU의 제안에 한국정부가 호응하여 한-EU 기본협력협정은 1996년 10월 28일

### 「한-EU 기본협력협정(1996년 서명, 2001년 발효)」 주요 내용

- 상호 최혜국 대우 부여
- 시장접근조건 개선, 경제활동의 공정경쟁 조성, 조달 시장 개방협의 등 무역 협력
- 지적·산업 및 상업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 보장
-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분야에서 협력 증진
-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과정에서 적절한 협의
- 경제 산업 협력, 과학·기술협력, 환경보존 및 에너지 분야 협력 증진
-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문화·정보 분야 협력
- 제3국 개발원조 협력
- 협정 이행 및 협력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위 설치

자료: 주유럽연합대사관

체결되어 2001년 4월 1일 발효되었다.

한-EU 기본협력협정은 종래의 통상현안 위주에서 정치적 이슈들을 포괄할 수 있는 확대된 협력의 제도적 틀을 제공하였다. 기본협력협정에는 무역협력, 농·어업, 해상운송, 조선, 지적재산권, 기술 규제, 경제 및 산업 협력, 마약 및 돈세탁, 과학기술, 환경, 에너지, 문화, 개발원조 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EU 기본협력협정에서 양자 간 정치대화 채널을 정례화했다는 측면에서 공동위원회 창설은 중요성을 갖는다. 또한 한-EU 기본협력협정에 부속된 공동정치선언(Joint Declaration on the Political Dialogue)은 정치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상회담 정례화, 연례 각료회의, 전문가회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한반도 문제 등 주요 이슈에서 EU와 한국은 정치적 공조를 확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한-EU 기본협력협정 체결에 따라 2001년 이후 한-EU는 거의 매년 한-EU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왔다. 이를 통해 고위 공무원 간의 대화채널을 확보하였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제7차 한-EU 공동위원회에서는 G20에서의 협력방안이 논의되었고, 무역 분야에 관련된 이견이 조율되었다. 또한 항공안전에 대한 양측의 협력과 인적교류의 확대 등이 논의되었다. 이와 같이 한-EU 공동위원회에서는 특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이 논의되고 있다.







★ 한-EU 각료회담 개최 실적

	시기	장소
제1차	1983.3.28~29	서울
제2차	1984.7.3~4	브뤼셀
제3차	1985.11.12~13	서울
제4차	1987.4.30	브뤼셀
제5차	1988.9.15~16	서울
제6차	1989.7.6~7	브뤼셀
제7차	1991.5.27	서울
제8차	1992.11.10~12	브뤼셀
제9차	1993.11.11~12	서울
제10차	1994.10.27	브뤼셀
제11차	1995.11.28	서울
제12차	1996.10.28	룩셈부르크
제13차	1997.10.26	서울
제14차	1998.10.27	브뤼셀
제15차	2000.7.20	서울
제16차	2002.6.24	브뤼셀

주: 2001년 한-EU 기본협력협정 발효에 따라 한·EU 공동위로 대체  
자료: 주유럽연합대사관

★ 한-EU 공동위원회

	시기	장소
제1차	2001.5.29	서울
제2차	2003.7.7	브뤼셀
제3차	2004.7.5	서울
제4차	2005.6.20	브뤼셀
제5차	2006.6.19	서울
제6차	2007.6.1	브뤼셀
제7차	2009.2.9	서울

자료: 주유럽연합대사관

한-EU 기본협력협정 체결 이후 양측의 경제·정치 관계의 발전에 따라, EU는 2007년 양측의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상호보완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주요 산업 협력국에 처음으로 제안된 FTA를 타결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 관계를 더욱 촉진한다. 둘째, 기존의 기본협력협정을 21세기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양측 관계의 다른 측면을 강화한다.

EU는 위와 같은 제안을 하면서 기존의 기본협력협정을 개정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기존의 협정은 10여 년 전에 협상된 것으로 여러 측면에서 시대에 뒤떨어지므로, FTA 시행과 함께 좀 더 내실 있는 시각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들에 많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양측의 관계가 좀 더 활성화된 분야에서는 협정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는데, 예를 들면, 기후 변화, 환경, 에너지 안보, 교육, 문화, 보건, 수송 또는 정보 사회 등의 부문에서 충분한 협력의 기반으로 작용하기 위한 현대적 또는 세부적 조항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한국과 같은 글로벌 파트너와 EU 간의 협정은 인권존중,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테러 방지, 이주 문제, 국제 형사 재판소와의 협력 등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우려할 만한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 의지와 공동의 가치를 발현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의 협정은 중요한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적, 국제적으로 좀 더 긴밀하게 활동할 명확한 범위를 제시한, 핵심적 글로벌 사안에 대한 정치적 협력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필요성에 공감한 한-EU 양측은 그 동안의 양자 협력관계 발전 및 국제정세 변화에 부합하도록 1996년 체결한 기본협력협정 개정 협상을 2008년 6월부터 시작하였다.

한-EU 기본협력협정 협상 중인 2009년 5월 23일 서울에서 EU 순회 의장국인 체코의 바츨라프 클라우스 대통령과 조제 마뉴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가졌고, 양측 정상들은 한-EU 기본협력협정 개정과 한-EU FTA 체결을 통해 한-EU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 자리에는 EU 측의 베니타 페레로-발드너(Benita Ferrero-Waldner) EU 대외정책 및 근린국 정책집행위원과 캐서린 애쉬톤(Catherine Ashton) 무역 집행위원도 참석하였다.

정상회담에 앞서, 조제 마뉴엘 바호주는 “한국은

EU 입장에서 역동적인 경제, 무역, 투자 협력국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한국은 EU가 ‘가치동맹(alliance of values)’을 만들기를 원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상대국이다. 한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무게에 걸맞은 역할을 국제무대에서 수행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EU는 기후변화, 세계경제위기 극복 등의 중요 문제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베니타 페레로-발드너 EU 대외정책 및 근린국 정책집행위원도 한-EU 정상회담에 앞서 한-EU 기본협력협정의 개정은 인권, 대량살상 무기 비확산, 테러 방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같은 문제에서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로 활동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EU 양측의 의지에 힘입어, 2009년 10월 15일 브뤼셀에서 한-EU FTA가 가서명되었고, 하루 앞선 10월 14일 런던에서 한-EU 기본협력협정의 개정안이 가서명되었다. 1996년 체결되어 2001년에 발효된 기존의 한-EU 기본협력협정이 양측 정치협력의 장을 뒷받침하였지만, 상호 최혜국 대우, 공정경쟁, 에너지 분야 등 경제 분야의 협력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이번 개정안은 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 및 사법 분야 등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였다.

외교통상부는 금번 협정 개정의 의의로 한-EU 기본협력협정 개정이 양자 관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한국과 EU가 대등한 동반자로서 지역 차원은 물론 전 세계 차원의 문제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EU 기본협력협정은 경제정책대화, 기업분야, 관세, 경쟁, 정보사회, 과학 및 기술, 교통, 소비자보호, 건강, 고용 및 사회 문제, 환경 및 천연자원, 기후변화, 농업, 농촌개발 및 임업, 수산 및 해양, 개발원조 등의 기존 분야를 확대·강화하였다.

한편 정부 분야(정치대화 강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국제범죄, 테러리즘 등), 내무·사법 분야(법무협

★ 한-EU 기본협력협정 개정안

기존 협력 분야의 확대·강화	경제정책대화, 기업 분야, 조세(신설), 관세, 경쟁, 정보사회, 과학 및 기술, 교통, 소비자보호, 건강, 고용 및 사회문제, 환경 및 천연자원, 기후변화, 농업, 농촌개발 및 임업, 수산 및 해양, 개발원조 등
신설 협력 분야	정부 분야 (정치대화 강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국제범죄, 테러리즘 등), 내무·사법 분야 (법무협력, 개인정보 보호, 이민, 사이버 범죄, 법 집행 등), 미디어, 교육, 관광, 시민사회, 행정협력, 통계 등

자료: 외교통상부 (2009년, 10월, 14일), “개정 한-EU 기본협력협정 가서명”, 보도자료.

력, 개인정보 보호, 이민, 사이버 범죄, 법 집행 등), 미디어, 교육, 관광, 시민사회, 행정협력, 통계 등의 분야가 개정된 한-EU 기본협력협정에 신설되었다.

금번 한-EU 기본협력협정의 개정으로 非경제·非통상 분야에서 양자 협력이 공고해질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이는 한-EU 기본협력협정 개정이 가서명된 다음날 가서명된 한-EU FTA와 함께 한-EU 양자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안상욱 한서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의 보호주의 조치들을 경계

## Nations use protectionist measures to boost domestic economies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of 2007 triggered the current global economic crisis and the volume of world trade is expected to contract in 2009 as a result. Politicians around the world are feeling the pressure from within and have started implementing discriminatory measures in both trade and finance. Governments' role has been expanding in almost every corner of the world and it seems necessary for recovering their economies. Economic stimulus packages typically include policies of raising non-tariff barriers by giving subsidies and providing supporting mechanisms. Nations will face a challenge of balancing the need for increasing governments' support for the recovery but also to contain the spread of protectionism.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는, 30년 만에 세계 교역규모의 절대적 크기가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 심리를 유발하고 있다. 두려움이 앞선 각국은 보호주의적 성향의 무역 및 금융 정책들을 발표하기 시작하였고, 위기탈출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면서 보호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위기 이후 실시되고 있는 경기부양책은 비관세장벽을 타고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각종 지원책을 통해 교묘한 보호주의를 양산하고 있다.

###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보호주의의 교묘한 변형

금융위기로 인한 자국 내 기업 도산과 고용 감소를 막기 위해 각국은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었다. 문제는 보호주의조치가 일국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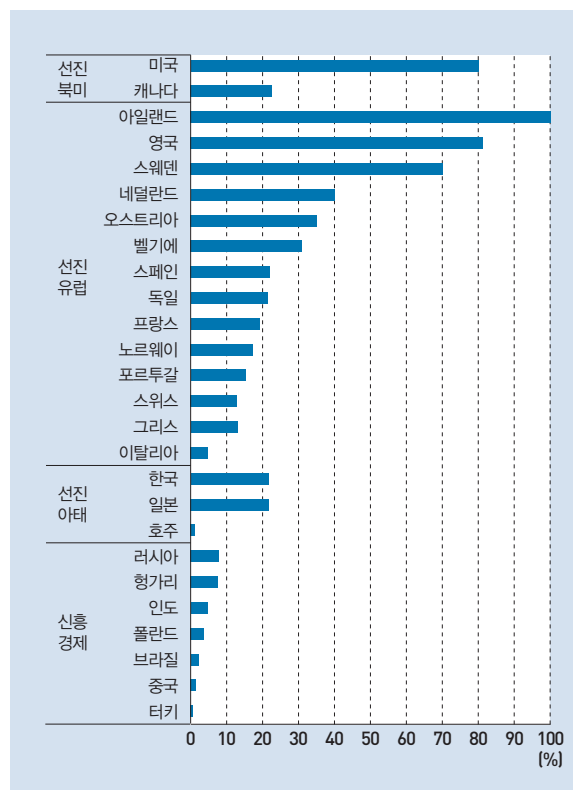
최근 보호주의적 성향을 띠는 조치들은 직접적인 교역제한 방식으로 나타나기보다 경기부양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비관세장벽의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첫째,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부양책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구제금융 조치들을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산업에 대한 각국의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2008년 12월 19일 GM, 크라이슬러에게 174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실시

하기로 결정하였다. EU 주요국들 역시 자동차산업에 특화된 구제금융을 실시하였는데, 프랑스는 르노와 푸조 등에게 60억 유로 이상의 금융지원을 계획하였고, 영국도 채무보증 및 대출지원 등 10억 파운드 수준의 자동차업체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독일 역시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수요의 급감으로 인해 소비가 줄고 기업생산이 줄어들자 자동차 소비를 늘려 내수 진작을 촉구하는 자구책을 내놓았다.

둘째, 은행산업에 대한 구제금융과 정부보증 역시 보호주의의 한 변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각국의 금융기관들이 부도위기에 직면하자 주요국들은 일제히 공조해 자산매입, 정부보증 등을 통해 금융부문을 회생시키기 위한 자본확충 노력을 기울였다. 이 가운데 아일랜드는 2008년 GDP 대비 무려 263%에 해당하는 구제금융을 실시하였고, 미국은 79.6%, 영국은 81.8%의 구제금융을 실시하였다. 또한 스웨덴 70%, 프랑스 19%, 독일 22.2%, 그리스 11.6% 등 EU 회원국들도 최소 10% 이상의 구제금융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구제금융 자체가 지니는 보호주의적 성격보다는 구제금융을 조건으로 실행한 정부의 역할이다. 네덜란드 은행 ING는 정부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네덜란드 정부와 자국 기업 및 가계에 대한 대출을 250억 유로 규모로 증가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은 프랑스 은행들은 국내

★ 금융부문 재정지원 규모 (GDP 대비)



주: 2008년 GDP 대비로 계산된 2009년 4월 15일 현재 자료  
자료: IMF, FAD-MCM database on public interventions

대출을 확대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한 그리스의 은행들은 조건 제시 수준을 넘어서 280억 유로라는 구제금융 전액을 해외로 유출하지 않도록 정부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일련의 보호주의적 정책노선은 소위 '금융보호주의'로 일컬어질 정도이다.

### 보호주의 조치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 의구심 제기

이전부터 보호주의조치가 갖는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어 왔다.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국내수요를 증가시켜 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였으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는 분명 직·간접적인 보조를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는 형태를 띤 보호주의조치로 WTO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보호주의조치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를 논할 때 주요 예로써 거론되는 것이 1930년에 제정된 미국의 「스무트-홀리법(Smoot-Hawley Act)<sup>1</sup>」이다. 이 법은 광범위한 관세 인상을 유발하여 국제교역을 급속히 감소시키고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론적으로 관세 인상은 원자재 및 투입재의 수입 감소를 유발하여 자본 축적 및 투자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교역은 물론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다. 이와 달리 국내 산업보호가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고 굳게 믿는 이들이 있다. 대표적인 인물인 미국의 경제학자인 아이젠그린(Barry Eichengreen)은 「스무트-홀리법」이 물가 하락 및 실질임금 상승을 억제하여 공급을 확대시켰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그에 따르면 당시 교역이 급감한 것은 대공황 자체의 문제이지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인한 결과라고 아니라는 것이다.

보호무역주의의 확장적 효과에 대한 믿음은 보호받는 부문의 교역장벽을 강화시켜 해당 부문의 상대가격이 상승하고 단기적으로 생산 및 고용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러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비효율적인 자원 재배분이 일어나 경제의 효율성이 하락하기도 한다. 여기서 전자가 후자를 상쇄시킬 수 있어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는 절대적이지 않고 경우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초래한다.

### 보호주의를 국가 이기주의로 단정 짓기 곤란

최근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상품가격을 유지하고 고용을 보호해 소득과 내수부양 효과를 얻는 것

<sup>1</sup> 경쟁력을 상실해가던 노동집약적 산업을 관세인상을 통해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미국이 제정







은 비정상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다. 자유주의론자인 크루그먼(Paul Krugman) 역시 내수부양효과가 있는 단기적인 보호무역정책은 실행가능하다고 했다. 크루그먼의 설명에 따르면 소득향상 효과가 있는 단기적인 보호무역정책은 무역을 왜곡시키지만 극심한 침체를 극복함으로써 이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한 국가의 보호주의 조치를 다른 국가가 수용할 때에만, 즉 보복조치가 없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라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이번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가 미국과 유럽에 비해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국가들이 취한 보호주의적 조치에 따른 후유증이 아시아국가에게로 고스란히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보호주의조치들은 무역 왜곡을 통해 아시아 국가에 전이될 후유증을 충분히 보상할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해야만 할 것이다.

### 보호주의 조치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이번 금융위기 이후 전개되고 있는 보호주의조치들에 대해 몇 가지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보호주의조치가 경제의 효율성 감소를 상쇄시킬 만큼 충분한 경기부양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보호대상 부문에 대한 수요 감소로 경기확장 효과가 단기에 사라지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호주의조치에 따른 효과로 가격체계가 왜곡되고 비효율성이 증대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가격체계가 왜곡되면 국내적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교역은 물론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이제 시작된 글로벌 경기 회복이 다시 침체국면으로 빠져드는 더블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셋째, 수요 감소에 따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 및 은행 업계의 경우 일국의 일시적인 금융지원이 타국의 경쟁력을 왜곡하여 단기적인 피해를 입

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최근 영국정부가 RBS와 로이즈 은행에 600억 달러 규모의 공적 자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정부 개입이 반복된다면 그 결과는 결코 단언할 수 없다.

2007년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래 전 세계 국가들이 실행한 보호주의조치들은 관세 인상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 보조금과 각종 지원책 형식을 띤 것이다. WTO가 설립된 이래 무역자유화조치가 진전됨에 따라 관세 인상과 같은 직접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만큼 비관세장벽의 형태를 띤 보호주의의 변형들이 성행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특히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와 같이 전 세계 선진국들이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는 위기탈출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실행한 모든 조치들(경기부양책을 포함)이 보호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이유로 비난받기에는 지나치게 큰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는 다수당 정권과 이익집단 세력이 결합되어 보호주의적 성향을 띤 정책노선으로 회귀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오늘날 국제기구가 민족국가를 대신하는 세계 정치경제 체제 내에서는 국제기구가 부재했던 1930년대와는 달리 보호주의 노선이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경기부양책의 탈을 쓰고 이루어진 갖가지 보호주의조치들에 대해 주목해야만 한다. 다행히 국제공조의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G20 회의에서 새로운 보호무역조치를 금지하는 「스탠드 스틸(Standstill)」 조항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국제공조의 장을 통해 우리는 위기극복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보호주의조치들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WTO 규정의 준수와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비용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양오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EU 기후변화정책에 대한 산업계의 시각

## Industrial sector's view on EU's Climate Change Policies

EU's implementation of the "20-20-20 strategy" shows its strong commitment to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The EU also played a leading role in bringing the nations together to agree on devising a road map for emissions reduction until the end of 2009 at the 2007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Bali. It is expected to lead, once again, for countries to agree on the Post Kyoto Protocol at the Copenhagen Conference in December, which will oblige the nations to reduce a significant amount of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20. A rising number of EU industries believe that the low-carbon economy will provide the next growth engine, and enable them to achieve both high rates of economic growth and an expansion of employment.

### 저탄소경제를 위한 '20-20-20 전략' 추진

EU는 2006년 10월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스턴 보고서(Stern Report)<sup>1</sup>>가 조속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한 이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상해왔다. 그 결과 2007년 3월에 열린 EU 각료이사회에서 EU 정상들은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채택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EU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이러한 EU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일명 '20-20-20 전략'이라 불린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GHG)를 최소 20% 절감하고, 여타 선진국들이 국제협정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경우 그 목표를 30%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sup>2</sup>이며, 둘째는 2020년까지 EU의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2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20-20-20 전략'을 채택한 EU는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200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도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sup>1</sup> 니콜라스 스태(Nicholas Stern)은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영국정부 경제국의 국장으로 재직 중인 인물로, 2006년 10월 30일에 <기후변화의 경제학> 보고서를 작성하여 영국 총리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sup>2</sup> 주요국들이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경우, EU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80~95%로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포스트교토의정서」에 합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이후 新리스본전략(new Lisbon Strategy) 차원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아울러 회원국들이 저탄소경제(low-emission economy)<sup>3</sup>를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

### 저탄소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

EU 집행위원회는 21세기 EU 경제의 경쟁력과 번영을 위해서는 남들보다 한발 앞선 기후변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조속히 이루어지면 기술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으나, 대응이 늦어지면 적응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의 4개 경제대국은 환경제품 분야의 국제무역에서 3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저탄소에너지 시장은 2050년에 5,000억 달러로 커지고, 유엔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09년 청정에너지 분야에의 투자는 1,000억 달러에 이르고, 2010년 태양에너지 매출은 186~231억

<sup>3</sup> 2009년 하반기 각료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은 이를 'Eco-efficient economy'라고 부른다.





# 리스본조약의 특징과 시사점

## The Lisbon Treaty: What it contains and what's next?

EU leaders signed the “Treaty of Lisbon amending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2007/C306/01) in Lisbon on the 13th of December, 2007. The title is self-explanatory: its substance includes amendments to previous treaties and hence the Lisbon Treaty is also known as the “Reform Treaty.” It was ratified in a 2nd referendum in Ireland on the 2nd of October, 2009, and the president of the Czech Republic completed the process by signing on the 3rd of November. The treaty is to officially become law on the 1st of December.

### 리스본조약의 채택과 비준

2007년 12월 13일, EU 정상들은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EU 조약 및 EC 설립 조약을 개정하는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 amending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2007/C306/01))’에 공식 서명하였다. 조약의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스본 조약은 기존의 기본조약인 EU 조약과 EC 설립 조약을 수정하는 조약으로서 ‘개혁조약(Reform Treaty)’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리스본조약은 EU 회원국의 정상들이 서명하여 비준절차가 진행되었으나,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비준 거부로 폐기된 ‘유럽헌법조약(European Constitutional Treaty, 일명 유럽헌법)’<sup>1</sup>을 대체하는 ‘단순화된 조약(Simplified Treaty)’의 형태로 바뀌었다. 따라서 리스본조약은 유럽헌법이 가지는 ‘헌법적 성격’을 가질 수 없게 됨에 따라, 비준도 국민투표가 아닌 회원국 국내의회에서의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일랜드만 국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 투표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08년 6월 13일 실시된 1차 투표에서는 부결되었으나, 2009년 10월 2일 실시된 2차 국민투표에서 찬성 67.1%로 무난히 비준되었다.<sup>2</sup> 그리고 지난 11월 3일 리스본조약 비준의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 있던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이

조약문에 서명함으로써 유럽 통합 작업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로써 리스본조약은 다음 달 12월 1일자로 공식 발효하게 되었다.<sup>3</sup>

### 유럽헌법조약과 리스본조약의 차이점

그렇다면 리스본조약은 유럽헌법조약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일부 언론과 학자들이 두 조약의 법적 차이에 대한 엄밀한 검토 없이 기사를 작성하고, 대담을 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두 조약을 구별하는 대전제는 ‘헌법적 성격의 유무’이다. 즉, 유럽이사회는 “새로운 조약은 헌법적 성격을 가질 수 없다”는 대전제하에서 정부간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 IGC)에 리스본조약의 제정 작업을 위임하였다. 그 결과, 리스본조

<sup>1</sup> 유럽헌법조약의 본문 조항에 대한 한글 번역서와 유럽헌법조약의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서는 각각 채형복 (2006. 3.), 『유럽헌법조약』, 서울: 높이깊이, p. 276.; 채형복 (2006. 4.), 『유럽헌법론』, 서울: 높이깊이, p. 244.

<sup>2</sup> 채형복 (2009. 9. 23.), “EU 리스본조약 비준, 왜 아일랜드에 주목하는가?—10월 2일 제2차 국민투표 실시” 『프레스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92311604&Section=05>

<sup>3</sup> 2008년 5월 9일 관보(Official Journal)를 통하여 ‘EU 조약’과 ‘EU 운영조약’ 통합본(Consolidated versions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2008/C 115/01)(OJ C 115 of 9 may 2008, p. 1)을 게재하였다. 관보의 법률(L Series)로 확정 공포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보완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 통합본의 조문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그리고 Treaty on European Union은 TEU로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은 TFEU로 약칭한다.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앞으로 저탄소경제야말로 성장과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해줄 것임을 시사한다.

EU의 산업계는 ‘20-20-20 전략’이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믿고 있다. 우선 원유 및 가스 수입이 감소하여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고, 경제적으로도 2020년까지 약 500억 유로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배럴당 61달러 가정 시). 저탄소기술은 공장, 발전소, 건물, 승용차, 트럭 및 전기 기기 등 산업계 전반의 신재생 및 혁신 공정에 적용될 것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200억 유로의 매출과 30만 개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노동집약적이고 중소기업에 의존하는 특성이 있어 2020년까지 약 100만 개의 신규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영향은 차이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산업별 영향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닌다.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2004년 기준)을 살펴보면, 에너지산업, 운송 및 물류, 건축, 제조업, 임업, 농업, 쓰레기 및 하수처리의 순이다. 여기서는 에너지 산업과 운송 및 물류, 건축 분야의 영향을 살펴보겠다.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sup>4</sup>은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에너지 업체들은 청정 및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확대를 위해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운송 및 물류 산업은 OECD 국가 에너지 소비량의 60%를, 신흥개도국 에너지 소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에너지 산업과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 CEO의 66%는 온실가스 규제 강화가 운송 및 물류 산업의 성장에 잠재적 위험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일부 운송 및 물류 업체들은 에너지 절약과 대체에너지 차량의 이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sup>5</sup>

건설업계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EU는 지난 2009년 4월에 2019년부터 EU 내 모든 신축 건물에 제로에너지를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중순까지 회원국 정부는 기존 빌딩을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정지원정책과 국가별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 주택과 빌딩이 전체 에너지 소비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의 시행으로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해볼 수 있다. 제로에너지 빌딩 정책은 향후 설계 및 건축 기술, 건축 기자재, 가정용 기기의 대혁명을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된다.

### EU 산업계는 코펜하겐 총회를 예의주시

코펜하겐 총회에서 2012년 「포스트교토의정서」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원가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EU 산업계는 EU의 기후변화 정책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sup>6</sup> 이 경우 EU 탄소배출권거래(ETS) 시장을 확대 및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려는 EU의 계획은 차질이 예상된다.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20-20-20 전략’이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에 EU 산업계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려면 미국, 중국 등 여타 국가들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EU는 코펜하겐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원하고 한다. ★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sup>5</sup> UPS는 하이브리드 전기 및 천연가스 트럭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FedEx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다.

<sup>6</sup>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원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라는데 동의하면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확대와 강화에는 반대하고 있다.

<sup>4</sup>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석유, 가스, 석탄이 전 세계 에너지 생산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약과 유럽헌법조약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본질적 차이를 가진다.

첫째, 헌법적 성격을 가질 수 없으므로 리스본조약은 유럽헌법조약과는 달리 ‘헌법’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소위 리스본조약은 ‘미니헌법’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이 용어는 니콜라 사르코지 현 프랑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유럽헌법조약을 대체하는 단순화된 형태의 조약으로서 ‘미니헌법’의 제정을 제안한데서 유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이 용어는 유럽헌법조약이 가지는 복잡성에 대응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므로 리스본조약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가 아니다. 또한 ‘헌법’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리스본조약을 가리키는 용어로서는 부적절한 것이다.

둘째, 리스본조약은 헌법적 성격을 가지는 일체의 조항을 둘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럽헌법조약에 규정되어 있던 깃발(flag)·찬가(anthem)·모토(motto)와 같이 EU의 상징과 관련된 내용은 리스본조약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유럽헌법조약에 규정된 ‘연합 외무부장관직(Union Minister for Foreign Affairs)’도 리스본조약의 헌법적 성격이 부인됨에 따라 ‘연합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자(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로 변경되어 도입되었다.

넷째, 일부 언론과 학자들은 유럽이사회 상임 의장을 ‘EU 대통령’이라 부르고 있다. 이는 조약문의 영문 표기인 ‘President’를 ‘대통령’으로 잘못 표기하거나 혹은 잘못 이해한 데에서 기인한다. 리스본조약이 유럽정치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헌법적 성격’을 가질 수 없는 리스본조약에서는 ‘대통령’을 둘 수 없다.<sup>4</sup>

### 리스본조약의 특징

리스본조약은 개정 방식의 측면에서 기존 조약을 수정 혹은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EU의 틀을 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유럽

헌법조약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EU의 전반적인 개혁을 의도하고 있는데, 그 주요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스본조약은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 도입된 EC·공동외교안보정책(CFSP)·사법내무협력(암스테르담조약에 의해 경찰·형사사법협력(PJCC)으로 변경됨)의 ‘삼주체제(三柱體制 three pillars)’를 폐지하였다. 그동안 삼주체제는 ‘초국가성’을 가지는 EC와 정부간주의를 지향하는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사법내무협력으로 나뉘어 있었고, 또한 EC와 EU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외정책 수행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리스본조약은 EU라는 단일한 이름 아래 유럽 통합의 지속적인 추구를 의도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EU 체제하에 기존의 통합 체제를 재편성한 것이다.

둘째, 리스본조약은 TEU 제47조에서 “연합은 법인격을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EC와 EU의 공존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과 논란을 종식시켰다. 즉, TEU 제1조 3단(“The Union shall replace and succeed the European Community.”)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앞으로 EU는 EC를 ‘대체’하고, ‘승계’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개정된 조약의 명칭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있다. 즉, 리스본조약은 기존의 EU 조약과 EC 설립 조약을 개정하면서 후자를 EU 운영 조약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EU의 일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유럽헌법조약과는 달리 EU 기본권헌장의 본문 조항들은 리스본조약 본문 속에 편입되지 못하였다. 다만, TEU 제6조 1항은 “연합은 2007년 12월 12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채택된 2000년 12월 7일자 기본권헌장이 정하는 권리, 자유 및 원칙을 인정한다. 즉, 기본권헌장과 제조약은 법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규정하여 기본권헌장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넷째, TEU 제50조 1항은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헌법규정에 따라 연합의 탈퇴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자동탈퇴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탈퇴희망국은 유럽이사회에 그 취지를 통고한 후 탈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탈퇴할 수 있다. 이 ‘자동탈퇴규정’은 리스본조약에서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 리스본조약의 시사점

리스본조약은 ‘헌법적 성격’을 가지는 일체의 규정을 두지 못함으로써 유럽헌법조약에 비하여 유럽헌법의 위상을 갖기에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비록 표현과 용어는 변경되었다고 할지라도 리스본조약은 유럽헌법조약에 규정되어 있던 대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앞으로 EU의 법제도와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리스본조약이 시사하는 바를 그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째, 리스본조약은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 도입된 ‘삼주체제(三柱體制 three pillars)’를 폐지함으로써 EU를 중심으로 한 단일체제의 수립을 의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간주의가 완전히 폐지되고 전적으로 공동체주의 체제가 확립되기에는 어느 정도의 시일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CFSP는 리스본조약 하에서도 여전히 정부간주의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EU 제4조 2항은 “연합은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 특히 영토 보전, 공공질서의 유지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를 존중한다. 특히 국가안전보장은 계속하여 개별 회원국이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는 명문을 규정에 넣었다. 따라서 회원국의 국내안전보장은 여전히 국내 주권의 행사 영역에 속해 있어 공동체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리스본조약은 EU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EU만이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에서 대표성을 갖게 되고, 제3국과의 조약체결권을 향유하게 된다. 그동안 EC와 EU라는 양대 기구가 공

존함으로써 야기되는 혼동과 불편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EU에 대한 법인격의 부여는 EU를 단일한 법주체로 인정함으로써 공동시장 내부적으로는 법적 통일이 강화되고, 대외적으로는 EU의 교섭 능력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강력한 법실체로서의 EU가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셋째, EC 조약은 기본권 보장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점은 일부 회원국의 헌법과 EC조약이 충돌할 때 독일연방재판소 등 국내 최고법원에 의해 자국의 국내법에 대한 EC, EU 법 우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로 원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리스본조약은 EU 기본권헌장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함으로써 기본권 목록을 TEU와 TFEU에 두지 않고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게 되었다. 더욱이 TEU 제6조 2항은 “연합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위한 유럽협약에 가입한다”고 하여 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이 의무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EU 역내시장에서 기본권 및 인권의 보장이 한층 강화되게 되었다.

넷째, 리스본조약은 자동탈퇴규정을 두고 있다. 이 점은 탈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기존의 기본조약들과 대비된다. 물론 이제까지 탈퇴에 관한 사례는 전혀 없었지만 앞으로 30개 이상의 회원국을 거느린 거대 공동체가 되는 경우에는 가입 후 탈퇴를 원하는 국가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탈퇴한 국가가 EU에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조약상 가입절차(TEU 제49조)를 거쳐야 한다(TEU 제50조).

리스본조약이 ‘헌법적 성격’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EU가 연방제 혹은 정치공동체의 단계로 이행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리스본조약을 통하여 새로운 단일화된 법주체로서 ‘EU’가 등장함으로써 유럽 정치 통합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리스본조약은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

채형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sup>4</sup> 채형복 (2009. 10. 8.), “2010년 EU가 대통령을 뽑는다고?—리스본 조약 비준에 관한 한국언론의 오해”,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008111338&section=05](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008111338&section=05)>





# 유럽인의 식습관: You are what you eat!

## The eating habit of Europeans

The name of a British TV programme on Channel 4, “You are what eat”, is also the culinary philosophy of Jamie Oliver, a British TV chef. In 2006, Jamie Oliver persuaded the government of Tony Blair to committ 280million pounds of its budget on improving state schools’ junk-food oriented meal plans and making schoolchildren eat healthy foods. As a part of the plan, the UK Department of Health created a list of unhealthy foods, which mainly include those with high fat and salt contents and it has carried out various campaigns to publicise such information.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의 존재를 결정한다(You are what you eat)’. 영국의 한 민영방송인 Channel 4의 다이어트 프로그램 제목이었던 이 문구는 영국의 스타 셰프인 제이미 올리버(Jamie Oliver)의 요리 철학이기도 하다. 제이미 올리버는 정크 푸드 위주의 식단으로 구성된 영국 공립학교의 급식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당시 영국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Tony Blair)를 설득해 약 2억 8,000만 파운드의 정부 예산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도록 한 인물이다. 이를 계기로 영국의 교육부는 탄산음료, 감자튀김과 소금 및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중심으로 학교 급식에 부적절한 금지 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의무화했다. 건강한 급식을 위한 제이미의 학교 급식 캠페인 실시 초기, 신선하지 않은 고열량 정크 푸드에 익숙해 있던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의 요리에 거부감을 나타냈고, 당시 영국에서는 이와 같은 시도가 예산 낭비일 뿐 아니라 정부가 개인의 식단에 간섭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달 말 영국에서는 개인의 식습관과 관련된 이와 같은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폴 메이슨(Paul Mason)이라는 체중이 약 430kg인 48세 남성을 비만으로 인한 사망에서 구해내기 위해 영국 보건국(NHS: National Health Service)이 2만 파운드의 수술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는

심각한 비만으로 인해 수년 동안 직업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식생활을 도와줄 보호자와 이동을 위한 집안 보수 및 관리 비용 역시 정부의 몫으로 남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만을 흡연 또는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한 질병과 같이 생활습관의 선택적 문제로 보고 NHS의 비용 부담을 부당한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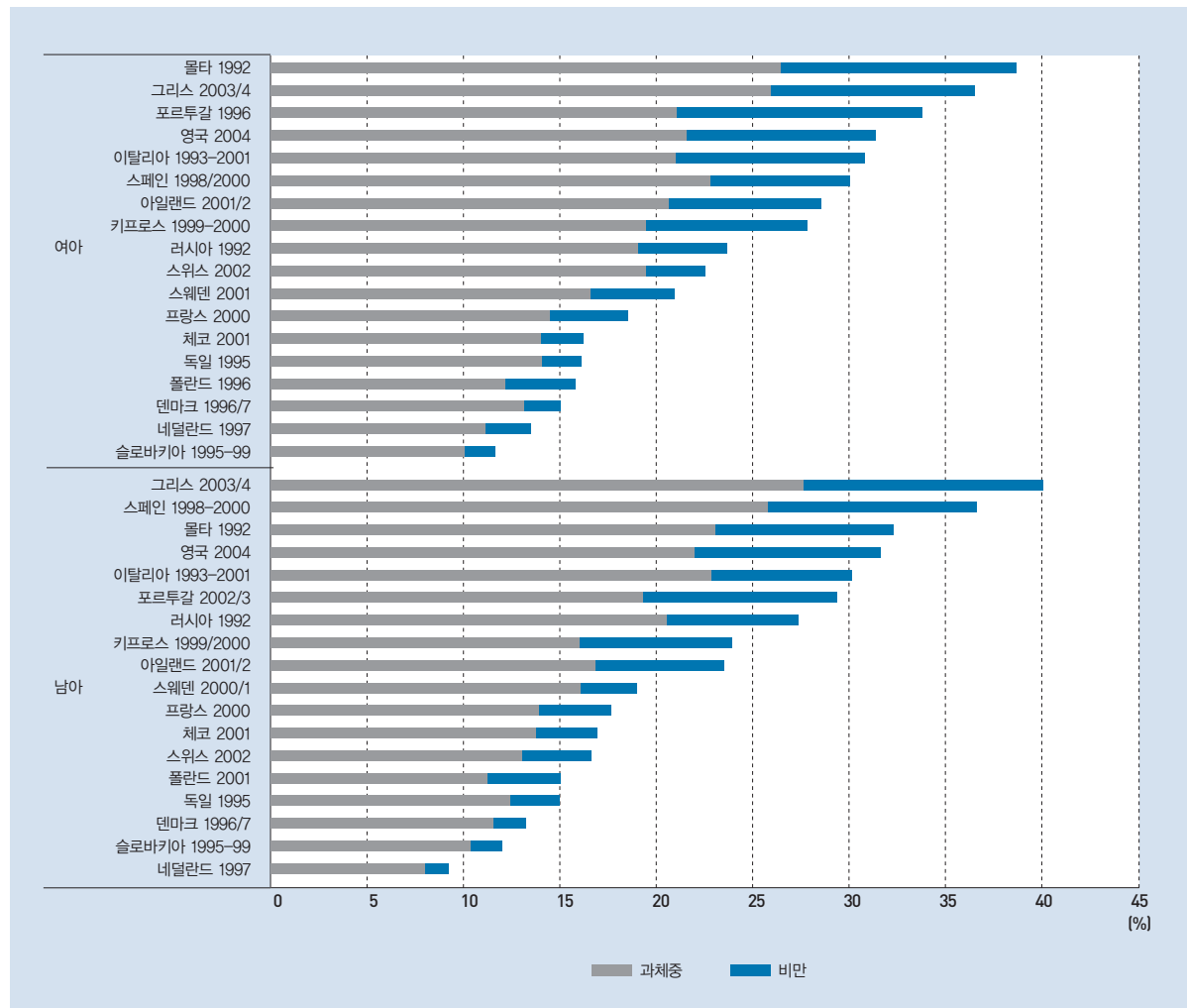
### 증가하는 유럽의 아동 비만

개인의 식습관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은 우선 질병비용 최소화에 있을 것이다. WHO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매년 1,700만 명이 비전염성 만성질환으로 사망하는데, 건강에 해로운 식단과 운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등이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현재 EU 회원국 아동 중 약 2,200만 명이 과체중으로 분류되며, 그중 500만 명 이상이 비만에 속한다. 게다가 이와 같은 수치는 매년 약 40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아동기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이는 또한 암, 당뇨, 심장 관련 질환 등과 같은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은 유럽의 비만을 포함한 과체중 아동(7~11세) 비율을 보여준다. 자료에 의하면 몰타,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남유럽 국가들과 영국의 비만 비율이 가장 높았고,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과 슬로바키아, 폴란드의 비만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 유럽 지역의 7~11세 과체중 및 비만 아동 비율



자료: International Obesity Task Force (2008), EURO-PREVOB Project, p.18, <<http://prevob.lshtm.ac.uk//D3.1.pdf>>

### 유럽 아동의 식습관

산업화와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인해 대다수의 서유럽 국가에서는 육류와 가공 식품의 소비가 증가했고, 이는 포화지방과 설탕 같은 고열량 식품의 섭취 증가와 비만을 초래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식습관에서 보여지는 한 가지 공통적인 경향은 매 식사시간 사이에 간식을 먹는 횟수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그 횟수가 더욱 두드러졌다. 네덜란드의 국내 식품 소비 조사기관에 따르면, 네덜란드인은 하루 동안 섭취해야 하는 칼로리의 상당 부분을 간식으로 충

당한다고 한다. 영국도 네덜란드와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반면, 스페인은 간식 섭취 비율이 낮았는데, 학교 또는 가정에서 이른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칼로리의 주요 공급원이었다.

주중에 부모와 함께하는 유럽 아동의 점심식사 비율에 있어서도 국가마다 차이를 보였는데,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에서는 41~77%의 아동들이 가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반면, 영국에서는 그 비율이 4%로 나타났다.

WHO에서 실시한 유럽 학생의 건강실태 조사<sup>1</sup>에 따르면 북유럽과 중유럽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아







침식사가 하루 중 주요 식사인 반면, 남유럽인 대다수는 아침식사를 소량으로 섭취하거나 거른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아동의 19%와 프랑스 아동의 10%, 영국 아동의 9%가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독일에서는 그 수치가 1%로 나타났다. 벨기에의 불어 사용지역 청소년 중 남학생 22%와 여학생 30%는 지금껏 한 번도 아침식사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스페인에서는 아침을 거르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아침식사는 청소년 건강과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유럽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식 비율 역시 유럽인들의 식습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핀란드 인들은 한 해 평균 125회의 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패스트푸드와 테이크아웃 분야가 외식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양한 국가에서 유럽 지역으로 온 이민자들이 외식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들은 본국 전통방식의 조리법과 음식으로 식당을 창업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더불어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채식위주의 건강 식단에 대한 요구 역시 증가했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학생들(약 70%)은 북유럽 학생들(약 10~40%)에 비해 사탕과 초콜릿 바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산음료의 경우 벨기에(60%), 스코틀랜드(52%)와 웨일스(44%)에서 높은 섭취 비율을 보였고, 북유럽 국가들(10%)과 스페인(26%)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벨기에(70%)와 웨일스(74%)의 젊은이들이 핀란드(38%), 노르웨이(34%)에 비해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높은 음주 비율을 보였다. 과일과 채소의 하루 섭취량도 국가마다 다양했다. 그린란드에서는 11세 소년의 31%가 체코에서는 13세 소녀의 91%가 하루에 한 번 과일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다수 유럽 국가 학

생의 50% 이하가 하루 권장량의 채소를 섭취했다.<sup>2</sup>

#### EU 학교 과일 제공 프로그램(School Fruit Scheme)

아동기에 형성된 식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될 확률이 높다.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과일과 채소를 WHO의 하루 권장기준인 400g 이하로 너무 적게 섭취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점차 악화되고 있다. 특히 11세 미만 아동의 20% 이하가 하루 권장량 이하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로 EU 집행위원회는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6~10세의 유럽 아동을 대상으로 과일과 채소를 학교급식에 무료로 배급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한 해 동안 9,000만 유로의 EU 기금을 투입해 과일과 채소의 구매와 배급에 사용할 예정이다. 기금은 회원국의 국내 기금과 함께 사용해야 하며, EU 기금과 국내 기금의 비율은 50:50이다(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75:25).<sup>3</sup>

EU의 학교 과일 제공 프로그램은 유럽의 비만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과일과 채소의 무료 배급을 통해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한 식단을 통한 영양 개선은 비만을 감소와 심각한 질병 예방에 필수적이라는 의식이 그 배경으로 작용했다. 또한 유년기에 형성된 건강한 식습관은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들이 과일과 채소의 지속적인 소비자로 이어지고, 나아가 이러한 결과가 다음 세대에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주현 연세-SERI EU센터 Post-Doc. 연구원

<sup>2</sup> WHO (2000). CINDI dietary guide. <<http://www.euro.who.int/Document/E70041.pdf>>

<sup>3</sup> Boel, F. M. (2008. 7. 9.). Fruit and Veg for better health!. Blogs of the European Commission. <<http://blogs.ec.europa.eu/fischer-boel/fruit-and-veg-for-better-health/>>

<sup>1</sup> Dixey, R. (1999). HEALTHY EATING FOR YOUNG PEOPLE IN EUROPE. IPC. <<http://www.euro.who.int/Document/E69846.pdf>>

# EU 출구전략을 수립할 시점

## EU countries face challenges in adopting exit strategies

A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ECOFIN Council, “Exit: Time to Plan”, by Bruegel, attempts to define an exit strategy. This report analyses the current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in Europe, which are affecting the decisions on when and how to pursue exit strategies. After examining the strategic interdependence and cross-boarder externalities, it forecasts the effects of the best case scenario and emphasises the need for a coordinated action at European level. It provides a number of valuable policy suggestions, such as making the European Systemic Risk Board operational.

벨기에의 싱크탱크인 브뤼겔(Bruegel) 연구소는 <출구전략: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EU의 ‘출구전략’ 이슈와 관련하여 현재 EU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상황을 분석하고 출구전략 수단의 상호의존성과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출구전략의 형태를 그려보고, 국제공조와 본 보고서에서 이상적으로 설정한 출구전략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를 분석하여 올바른 출구전략 실행을 위한 정책적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출구전략이란 위기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확대 예산, 금리 인화와 통화 완화 정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앙은행이 금융 부문에 투입했던 특별 지원 등 확장 재정정책을 정상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출구전략을 시행하게 되면,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상호의존적인 외부효과(side effect)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만약 어떤 은행이 아직 충분히 자본을 공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통화 긴축 정책을 실행하게 된다면, 이는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적절한 출구전략이 지향하는 목표는 크게 1) 재정의 지속 가능성 회복, 2) 중기 산출량 격차(Output gap) 제거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없이 거시경제 안정 달성, 3) 정부지원과 보조 없이도 금융 부문의 안정과 미래의 금융 불안정성 예방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출구전략은 1) 재정 긴축이 늦춰질수록 미래에 더 큰 부

		출구전략 시행 기관	
		정부	중앙은행
영향	거시경제	• 재정 건전화	• 통화 긴축 정책 (제로에 가까운 금리의 인상, 양적완화정책의 철회)
	은행	• 은행·은행에 대한 정부 지원 철회 • 은행 자본 확충 및 구조조정	• 은행 부문에 대한 유동성 지원 철회 • 거시건전성 강화

채 부담이 발생하고, 2)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지연될수록 인플레이션 등 미래의 잠재 위험과 가격 불안정성이 증가하며, 3)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실은행을 지원할 경우 비효율적인 금융시스템(부실 은행 등)이 비대해지는 등의 이유로 적절한 실행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출구전략 실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상화될 수 있는지, 정상화된다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 통화, 금융 부문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실행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한편 출구전략의 실행에 있어서 거시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도록 유로존과 EU를 아우르는 국제공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불균형적 회복과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해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탄력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금융위기는 모든 주요 경제 부문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실물경제에 대한 타격을 줄이고, 금융 부문의 붕괴를 막기 위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확대 예산과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고,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며, 금융 부분의 자금경색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 수단들은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다. 경기부양책은 가파른 부채 상상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특히, IMF는 2009년 유로존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에 달하지만, 2014년에는 90%까지 치솟을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적자 예산의 일부는 경기순환적인 것이지만, 다른 일부는 잠재산출량(Potential output)의 손실을 초래하여 경제 성장 및 회복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전에 발생한 위기들이 미친 영향의 결과를 살펴보면, 위기는 이후 수년간 잠재산출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장률이 위기 이전 상태로 회복된다 하더라도 산출량 수준을 낮추는 등 미래 경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정부의 낮은 세수는 구조적인 예산 적자를 초래한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잠재산출량 손실이 재정 건전화 노력의 규모(건전화 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는 유로존에 대한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시뮬레이션에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 1) 위기 이후 2020년까지 1.5%의 잠재성장률을 가정하고, 2) 2015년까지 0에 도달하도록 선형 산출량 격차를 설정하고, 3) 2011년 경기부양 패키지의 단계적 철회와 4) 공공 부문 차입에 대해 2.5%의 실질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가정하에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 의해 설정된 연간 0.5% 속도의 건전화 비율을 적용할 때, 잠재산출량의 지속적 손실에 따른 추정 부채 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안정성장협약」에 의해 부여된 예산 건전화를 위한 최소 제약선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IMF의 예측(90%)과 위기 이전(60%) 수준의 사이인 75%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잠재산출량의 손실이 없더라도 목표 달성을 위해 연간 GDP 0.5%의 건전화 비율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GDP 5%의 산출량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1% 이상의 건전화 비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출구전략을 시행하기에는 2010년 성장이 여전히 미약한 편이다. 따라서 경기부양 정책의 점진적이고 단계적 철폐가 필요하다. 재정 건전화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간에 걸쳐 시행해야 하는 계획인 반면,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보이면 재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수단이다. 따라서 수년 동안 힘든 작업이 될 재정 건전화 작업부터 가장 먼저 착수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공 부문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2011년 경기 부양 패키지의 철회와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재정 건전화는 2010년 여름 유럽이사회에서 채택되고 나면, 5년간 실행될 ‘유럽의 지속가능성장프로그램(European Sustainability Programme)’을 통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은행 부문의 자본 확충과 구조조정은 모든 EU 국가에서 신속하게 완료되어야 한다. 특히 EU 집행위원회와 중앙은행은 유동성 지원과 보장의 단계적 철회에 대해 명확한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 EU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제가 더블딥에 빠지지 않도록 출구전략 협력을 위한 임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ECB는 시기상조라 여겨지는 긴축적 통화 정책은 피하고, 재정 건전화 범위에 대해 예산 당국에 명확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잠재적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책을 항상 마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금리 낮은 상황에서 금융 부문의 불안정성 확대를 피하기 위해서는 ESRB의 창설을 서둘러야 하며, 거시 건전성 정책의 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기구와 장치에 대한 준비는 2010년 여름까지 마무리되어야 하고, 특히 은행에 대한 시의적절한 경기 대응 완충장치와 관리가 필요하다. (자료: Bruegel (2009). Exit: Time to Plan.) ★

이지혜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 연세-SERI EU센터 이사회 개최 Yonsei-SERI EU Centre bi-annual meeting

Yonsei-SERI EU Centre held its bi-annual meeting on the 14th of October at Chosun hotel. 9 of 10 board members attended the meeting where they were briefed on the progress of the Centre's recent activities. They also discussed on the future direction of the Centre. The EU Centre's performance was highly praised by the participants and they requested for an even more active role as the level of public interest is expected to rise as the Lisbon Treaty has recently been ratified and the Korea-EU FTA concluded.

Board Members in Attendance: Han-Joong Kim, the Chancellor of Yonsei University; Brian Mcdonald, the Head of the Delegat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Ki-Young Chung, the President and CEO of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Gang-Rae Lee, a Democrat member of Parliament; Alan Timblick, the Head of Seoul Global Center; Ian Gibson, the Deputy Director of the British Council, Korea; Michael Hellbeck, the Managing Director of Deutsche Bank AG Seoul Branch; Suk-Ryul Yoo, the President and CEO of Samsung Total Petrochemicals; Su-Kil Kim, the Deputy Chief Publisher of Joong-Ang Daily. Hee-Ryong Won, a Grand National Party member of Parliament was absent.

지난 10월 14일 '연세-SERI EU센터 이사회'가 조선호텔 일식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총 10인의 이사 중 9인의 이사가 참석하여 EU센터의 활동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안건을 의결하였다. 참석자들은 연세-SERI EU센터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EU FTA 체결, 리스본조약 발효 등 최근 EU 및 한-EU 관계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연세-SERI EU센터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또한 많은 의견을 제안하였다.

참석이사는 김한중 연세대 총장(이사장), 브라이언 맥도널 주한EU 대표부 대사,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앨런 팀블릭 서울 글로벌센터 대표, 이안 김슨 영국문화원 부원장, 마이클 헬벡 도이치은행 부행장, 유석렬 삼성토탈 대표이사, 김수길 중앙일보 부발행인이며,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참석하지 못했다.







## 연세대학교 EU Week 개최 EU week at Yonsei University

Yonsei-SERI EU Centre held the “EU week” between the 31st of October and the 6th and November at Yonsei University. There were two special lectures (the 4th and the 5th “EU Special Lecture”) on the 5th of November- Professor François Bafoil gave a lecture on “EU and Transformation of Eastern Europe” and Mr Hee-Sang Kim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gave another on “Key Contents of Korea-EU FTA Agreement.” Its final lecture was given on the 6th on Upgrading the Framework Agreement for Trade and Cooperation: Search for Korea-EU Strategic Partnership by the head of the MOFAT’s European division, Mr Eun-Joon Kim. Various events such as the “Mock EU Meeting”, “EU essay contests” and “EU Leadership Debate” also attracted much attention. Brian Mcdonald, the Head of the Delegat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Dr. Myung-Soon Shin, the Deputy Chancellor of Yonsei University, were present at the award ceremony.

연세-SERI EU센터는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연세대학교에서 EU Week를 개최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11월 5일에는 두 차례의 특강이 실시되었는데, 제4회 EU 특강은 “EU and Transformation of Eastern Europe”이라는 주제로 프랑수와 바포알 교수가, 제5회 EU 특강은 “Key Contents of Korea-EU FTA Agreement”라는 주제로 외교통상부의 김희상 과장이 맡았다.

이어 6일에는 “Upgrading the Framework Agreement for Trade and Cooperation: Search for Korea-EU Strategic Partnership”이라는 주제로 외교통상부 김은중 유럽국장의 EU 특강이 있었다. 또한 EU 모의정상회의 대회, EU 논문대회, EU 리더십 토론대회가 개최되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대회 시상식에는 브라이언 맥도널 주한EU 대표부 대사, 신명순 연세대학교 부총장 등이 참석하여 시상하였다.

